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 · 11 총선에서 노동정치 사례발표

발표자: 강인석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치국장

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정치활동의 특징과 사례

1) 정치 활동의 특징

- 경남은 자칭 진보 1번지라고 할 만큼 현역 국회의원 2명, 도의원 8명, 시의원 23명등 진보정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전국 광역도시 중 최다, 김두관 도지사 이후 공동 지방정부 운영 중임.
- 창원과 거제를 중심으로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진보정당의 기틀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고 있음.
- 노동자 당원이 경남당원(10,255명 중 3,451명)의 비율이 높다.
- 당과 대중조직,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 극우보수세력의 기반이 무너지고 진보 민주세력의 기반이 확장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의 분열 이후 창원, 거제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분열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에 여전하다.

2) 주요 사례

- 경남지역본부 정치위원회 일상 운영(정치국장, 월 1회 회의)
- 금속노조 정치위원회, 사업장별 정치위원회 운영(STX엔진, 한국산연, 현대로템, 한국지엠등)
- 진보정당 당원 확대 사업 및 세액공제 사업 연중 진행
- 일상적인 시민 봉사활동
- 정치학교, 1노조 1정치 교육 등을 통한 조합원 정치의식 고양 사업
- 진보실천단(구. 정치실천단) 조직 및 실천 사업
- 경남노동자신문 정기적 발행(정치 사업비 전 조합원 3,000원납부)
- 동별 간담회 및 가정방문, 가정통신문 발송사업
- 진보정당 후보 파견 및 일일 실천단 대규모 활동
- 시, 도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한 조례제정 및 민주노총 사업과 투쟁 연대 활동

2. 4·11 총선에서 경남지역본부의 목표와 주요 활동

1) 목표

- 진보민주세력 10석 이상 확보(진보정당 5석+비새누리당 5석)
- 진보정당 5석 이상, 진보정당 지지율 25%이상 확보
- 대중투쟁강화(MB심판, 비정규직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한미FTA 투쟁, 한반도 평화실현)

2) 결과

- 진보민주세력 1석(김해갑 민홍철 통합민주당)
- 진보정당 지지율 11.04%(민주진보세력 37.65%)
- 대중투쟁 강화(MB심판, 비정규직 철폐, 민간사찰규탄등)
- 진보정당 출마 지역 주요 득표

지역	정당	19대	18대	19대 정당	18대 정당	비고
창원 의창구	새누리당	54.12	49.89	51.09	38.63(한) 9.78(민) 17.34 (민주노동당) 4.02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야권단일	10.27	23.61		
	통합진보당	45.87	미출마	17.99		
	진보신당	미출마	9.82	1.19		
	투표율	54.8	43.0	54.77		
창원 성산구	새누리당	49.04	44.66	45.19		18대 민주노동당 당선
	민주통합당	야권단일	4.97	26.48		
	통합진보당	43.83	48.19	18.75		
	진보신당	7.12	미출마	3.62		
	투표율	58.3	50.4	58.27		
김해 갑	새누리당	47.17	50.85	43.53	39.29 (한) 21.38 (민) 8.15 (민주노동당) 2.43 (진보신당)	19대 민주통합당 당선
	민주통합당	48.33	21.56	40.20		
	통합진보당	야권단일	5.63	8.93		
	진보신당	미출마		0.88		
	투표율	53.8	40.1	55.41		
거제	새누리당	31.69	38.63	47.17	44.25	무소속 35.33 (김한표 당선)
	민주통합당	야권단일		24.62	9.55	
	통합진보당	야권단일	7.29	9.93	11.47	
	진보신당	32.96	15.55	8.48	10.11	
	투표율	53.8	43.9	53.84		
사천, 남해, 하동	새누리당	50.30	사천 47.33	54.17(사) 59.71(남)	45.74(사) 45.81(남)	18대 사천 민주노동당

			남해하동56.73	62.14(하)	57.98(하)	당선
	민주통합당	야권단일		16.75(사) 19.22(남) 19.02(하)	6.25 15.61 11.01	
	통합진보당	24.05	사천 47.69	15.34(사) 9.89(남) 9.60(하)	23.33 8.84 9.08	
	진보신당	미출마		0.58(사) 0.50(남) 0.55(하)	1.47 1.61 1.41	
	투표율	65.9	사천 57.7 남해하동70.9	62.73(사) 66.94(남) 71.43(하)		
의령,함안,합천	새누리당	54.48	49.47	59.10(의) 58.20(함) 65.50(합)	46.44(의) 45.46(함) 47.59(합)	
	민주통합당	야권단일	6.73	16.36(의) 19.78(함) 12.58(합)	8.21(의) 7.53(함) 7.75(합)	
	통합진보당	22.46	10.73	12.52(의) 11.91(함) 8.97(합)	11.64(의) 13.70(함) 10.84(합)	
	진보신당	미출마		0.69(의) 0.64(함) 0.45(합)	1.56(의) 1.86(함) 1.37(합)	
	투표율	60.4	52.6	63.53(의) 56.49(함) 63.53(합)		
거창,함양,산청	새누리당	46.22	55.05	58.25(거) 59.76(함) 60.73(산)	44.60(거) 46.94(함) 48.17(산)	
	민주통합당	미출마		14.81(거) 16.84(함) 15.80(산)	7.13(거) 7.71(함) 6.95(산)	
	통합진보당	16.46		11.85(거) 8.27(함) 9.63(산)	8.16(거) 5.61(함) 8.89(산)	
	진보신당			0.65(거) 0.54(함) 0.66(산)	1.58(거) 2.07(함) 1.68(산)	
	투표율	63.0	56.4	64.90(거)		

				61.72(함) 61.27(산)		
경남 전체	새누리당	53.80	한나라당45.03 친박연대17.95	53.8	45.03	
	민주통합당	25.61	10.51	25.61	10.51	
	통합진보당	10.53	10.62	10.53	10.62	
	진보신당	1.51	2.97	1.51	2.97	
	투표율	57.2	48.3	57.16	48.3	

3) 주요 활동

- 당원확대 사업 200여명
- 전 지역 국회의원 후보 출마(16개 선거구 전원 출마함)
- 노동정책 우리 손으로!(나는 국회의원이다.)
- 정치교육(빠이빠이 비정규직 연극공연 및 1노조 1정치 교육)
- 내 휴대폰을 열어라.
- 노동의제 정책 협약식(야권단일후보 전원)
- 노동자선거 대책본부 구성 및 파견자 실천단 활동(연인원 1,000명) -> 경남 전 지역에서 활동
- 경남노동자 신문 245,000부 배포
- 선거기간 중 각종 선거활동(지역 활동 및 유세단참가)

3. 4·11 총선 핵심 평가 지점

- 총선 결과 진보민주세력의 지지율 24.1%(18대)-> 37.65%
-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재확인
  [창원 의창구 당 17.99%, 후보 45.87%/창원성산구 당 18.75%, 후보 43.83%(진보신당 3.62%, 후보7.12%)/거제 통합진보당11.47%(진보신당 10.11%, 후보 32.96%)]
- 민주노총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 진보정당의 분열은 곧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 진보정당의 노동중심성은 힘과 권위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조직의 겸손과 연대로 확장되는 것이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의 유기적 결합을 하면서도 상호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비정규직 철폐투쟁(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집단부당해고 투쟁 2011년 12월 22일~지금까지 투쟁 중)을 선거운동 전 기간까지는 경남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막상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에 매몰됨.
- 진보정당 통합 과정, 통합진보당 창당과정, 민주노총의 선거 방침 결정과정에서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진보정당에 대한 확신성이 떨어짐.
- 진보정당의 분열은 경남지역의 경우 민주노총 내 금속노조의 분열로 이어지고 선거투쟁 내내 갈등을 함으로써 조합원 대중의 능동적인 활동을 내오지 못함.
- 반MB 야권단일화는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 수도권과 다르게 정책선거, 인물 선거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직선거로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안정적인 조직 확대가 없으면 절대 선거 승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선거 승리에 매몰되어 진보의 가치를 잃으면 안된다. 창원 성산구의 후보 선정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의 갈등, 진보신당과의 갈등은 선거 내내 창원뿐만 아니라 거제까지 영향을 끼쳤다.
  물론 진보신당의 경우 당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끝까지 독자후보를 유지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4. 향후 과제

- 진보정당의 확대강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기층당조직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동시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시, 도의원, 도와 결합해서 진행된 비정규직 조직확대사업, 보호자없는 병동사업, 불법하도급 근절관련 조례 제정, 경남비정규직센터 설립등 통해 조직확대, 정치운동 활성화.
- 진보정당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상생하면서 통합해야 한다.
- 진보정당의 노동 중심성 강화와 노동대중조직의 진보의 원칙, 단결

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 노동자 출신 간부들이 더 많이 진보정당으로 진출해야 하며, 진보정당은 노동자 출신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에서 조합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 민주노총+진보정당+진보적인 시민단체와의 3자 연대 사업을 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 비정규직 철폐등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과감하게 그리고 노동자, 민중과 함께 폭넓은 대중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 끝 –

4.11 총선투쟁,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 보건의료노조 총선 투쟁을 중심으로

(집단당원가입, 여소야대 국회, 원내교섭단체구성, 우리 후보를 국회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I. 총선 진행경과 및 주요 결과

1단계 : 준비기와 집단입당 조직 (1 ~2/23)
2단계 : 당 비례후보 선거 시기 (3/6 ~ 18)
3단계 : 국회의원 총선 시기 (3/29 ~ 4/11)

■ 1단계 : 보건의료노조 차원 준비기와 집단입당 조직 (1~2월)

- 1달여만에 4,500여 당원 집단가입으로 현장에서부터 진보정치혁명을 시작하다!

○ 2012년 정세는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 대폭발과 MB-한나라당 정권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그 어느 선거시기보다 노동자민중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직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조금 복잡하다. 외부 정세는 반 MB 새로운 정권교체 분위기로 변화와 희망으로 가득차 있지만 민주노총과 진보진영 내부는 진보통합운동과 정치방침을 둘러싸고 어수선하면서 혼란스럽기조차 하였다.

지난 1월 31일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아무런 선거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유회되고 말았고 그 이후에도 총선방침 결정과정에서 내부 논란은 계속되다가 2월 민주노총은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투표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결국 2012년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우리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또 한번 남의 승리에 박수만 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통해 최대의 정치적 승리를 얻고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정치적 격변기로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에게는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우리 의제를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열려진 정치적 공간에서 비판과 평론의 관점에만 머물지 말고 주어진 정치환경에서 적극적인 정치실천을 조직하려고 하였다.

보건의료노조 후보(비례와 지역)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거투쟁을 전개하여, 보건의료노조 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고 나아가 인력법, 무상의료,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여 산별운동과 보건의료운동을 한 단계 질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고자하였다. 법과 예산과 제도개선을 다루는 국회에 직접 진출하여 우리 문제 해결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있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2014년 지자체 선거에는 지역본부별로 더 많은 후보를 발굴하고 선거에 나서서 노동자 중심성이 확보되는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승리하는 선거투쟁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12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우리 보건의료노조 후보를 1차 확정했다. 나순자 상근 지도위원을 통합진보당 비례후보로,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통합진보당 지역후보(나주시,화순군)로 확정하고, 보건의료노조 후보의 당선과 4월 총선투쟁, 8월말 민주노총 '같이 살자 1-10-100 총파업투쟁', 나아가 진보정치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으로 정치투쟁과 대중투쟁을 결합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인부천본부 이은경 조합원이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월 12일 중집 수련회에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7대 사업방향과 세부 계획안을 확정했다. 7대 과제는 ▲첫번째 노동자 제 2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6대 핵심사업인 10만 당원확대, 100억 세액공제, 현장분회 결성, 1000만 연고자 찾기, 100만 총궐기, 투표참여운동을 적극 전개 ▲둘째, 진보정당의 노동자 중심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8천명) 당원가입운동 대대적 전개 ▲세째, 보건의료노조 출신 후보 2012년 총선, 2014년 지자체 출마 적극 조직 ▲네째, 세액공제 사업 전개 ▲다섯째, 노조 정치활동의 필요성을 담은 현장 간부조합원 정치교육 강화 ▲여섯째,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후 여세를 몰아 노동법 전면 재개정, 인력법 등 개혁입법 쟁취를 위해 8월말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적극 참여 등 정치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 ▲일곱번째, 산별과 현장 강화에 복무하는 제 2정치세력화 운동 등 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1-2월 한 달 반 동안은 전 조직적으로 8천명 당원가입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고, 1월 18일부터는 2012년 사업계획 수립과 총선방침 토론을 위한 지

도부 현장순회가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 지역후보와 비례후보가 확정되는 2월 23일까지 당원가입사업을 집중하였고 이후 4월 11일 선거투쟁과 더불어 2단계 당원가입사업을 전개하였다.

○ 그동안 지역과 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대표 국회 진출과 총선투쟁 승리를 위한 당원가입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런 헌신적인 노력결과 총 4,500여명이 새롭게 입당했다. 당원가입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본부가 2,664명을 넘어섰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전남 478명, 경기 433명, 강원 420명, 전북 410명 순으로 당원가입 규모가 집계되고 있다. 지부별로는 한양대가 553명, 보훈 418명, 이화의료원 319명, 연세대학교 원주의료원 234명, 고대의료원 204명으로 앞서나갔고 100명이 넘은 사업장도 15개나 되었다. 100명이 넘지 않더라도 지방의료원과 중소병원등이 조합원 숫자대비 많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개별 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30명 이상 당원이 확보된 지부 숫자도 무려 42개나 되었다.

○ 물론, 이런 결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사업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진보정당 통합과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의식이 존재했지만 2012년 열려진 정치적 공간을 우리 요구 해결의 장으로 만들려면 적극적인 정치적 실천을 조직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후보를 내면서 전 조직이 통합진보당 당원가입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 현장 또한 쉽지 않았다. 병원이란 곳 자체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있고 조합원 또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불신이 큰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이다, 하지만 ‘밤에 피는 장미’가 되어 조합원이 바쁜 낮 근무시간을 피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원가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순자 후보, 유지현 위원장과 지도부, 현장지부장, 전임 간부들이 몇 차례 만나고 설득한 끝에 조합원들이 당원가입 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밥 먹는 시간 10분 확보를 위해, 우리 현장 문제를 우리 후보를 통해 해결하기위해 당 가입을 하고있다. 이제 조합원들은 말한다. 정치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젠 친해졌다고. 정치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4월이 기다려진다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했다고,

○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집단 당원가입 사업의 과정과 성과는 노동계와 진보정치에서 신선한 충격이자 새로운 정치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 집단당원가입 사업은 단순히 목표 숫자를 채우는 당원가입사업이 아니라 당원가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산별노조에 대한 참여와 기대감이 커지며, 간부들의 현장활동력이 살아나면서 조직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합원이 소외된 상층중심의 정치운동, 산별노조운동과 정치세력화운동의 분리라는 지난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넘어 현장 조합원 중심, 산별노조와 함께 가는 제 2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진보정당에서 부족한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해가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 한편, 2월 7일 고대의료원 구로병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대표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등이 2012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무상의료 실현 등 8개항의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이 공동의제 해결을 위한 노동과 정치의 만남으로서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주면서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당과 세상을 멈추는 산별노조'로 가기위한 새로운 정치협력 모델이 되어 노동있는 복지국가를 힘있게 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집행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정책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첫째날 프로그램으로 우리 노조의 정치적 도전의 의미를 대의원들과 공유하기위해 이색적인 시도로 <정치톡톡 : "노동과 정치가 만나는 밤" - 보건의료노조 총선대선투쟁과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하였다. 이날 토크쇼는 이현주 의원(전북도)의 사회로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희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심경숙(양산시의원), 나순자(비례 후보)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치토크쇼에서는 ▶노동과 정치 - 노동자, 노조 간부로 활동할 때와 정치인이 되었을 때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네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 노동자 정치는? ▶2012 총선 대선의 의미와 전망, 당면한 4월 총선투쟁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4000명을 넘어서 목표 8,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집단입당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지자체 선거까지 지역본부별로 2명이상 당선을 목표로 후보 준비와 일상적인 지역 정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 순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본부별 합동 조합원 하루교육이 3월초 광주전남본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었다. 올해는 총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공동주제로 이번 총선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담은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과 임원들이 직접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정치교육을 강화하였다.

<지역본부별 하루교육 일정>

본부	기간	장소
강원지역본부	4/3~5, 4/6,9,10	영동: 강릉폴리텍 3대학 영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경기지역본부	3/20~22, 3/27~29	광림세미나 하우스(포천)
광주전남지역본부	3/3	화순하니움

	3/6~9, 3/13~16	나주중흥골드스파
대구경북지역본부	3/29 (시청집회 9:50-10:30)	팔공산대구은행 연수원
대전충남지역본부	3/27~30, 4/3~6	유성유스호스텔(3/27~3/28, 4/3~4/6)민주노총대전본부 (3/29~3/30)
부산지역본부	3/20~23, 3/27~30	민주공원 소극장
서울지역본부	3/20~23	노량진 CTS 아트홀
	3/26~29	여성플라자 아트홀
울산경남지역본부	3/20~22, 3/27~29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인천부천지역본부	3/20~22, 3/24, 3/28~30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
전북지역본부	3/20~23, 3/27~28	전북완주 교통문화연수원
충북지역본부		

■ 2단계 : 당 비례후보 선거 시기 (3/6 ~ 18)

○ 통합 진보당 비례 총선후보 선출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 2월 24일(금) 비례총선 후보 선출 선거공고
2. 2월 25일(토)~27일(월) 선거인명부 작성
3. 2월 28일(화)~3월 2일(금) 18시 선거인명부이의신청 및 부재자투표 신청
4. 3월 3일(토) 24시 선거인명부 확정
5. 3월 4일(일)~3월 5일(월) 20시 후보 등록
6. 3월 6일(화)~3월 13일(화) 24시 선거운동
7. 3월 14일(수)~18일(일) 투표기간

○ <무상의료 실현! 노동존중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우리 노조 나순자 후보는 유효당권자 74,794명 중 41,672명(투표율: 55.71%)이 투표한 결과 총 4,491표 득표(온라인 2,965 + 현장 1,526표), 득표율 11.02% 로 여성명부 중 3위, 전체 15명 후보 중 4위를 차지했다. 10%대 득표자는 4명에 불과한 가운데 5위는 5%대 득표에 그쳤다. 민주노총 출신 4명의 후보중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비례후보 선출 제도의 문제점과 모순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비례 대표 순번 11번을 받게되었다.

○ 나순자 선대본은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해 ▷1,000여명 당권누락, ▷자체 집계보다 낮은 인터넷 투표결과의 재검표, ▷현장투표 무효처리 등에 대해 선관위(위원장 김승교)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4.11 총선이후 공동대표단 결정에 의해 '당 비례후보 선거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우리가 문제제기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종 조사결과는 5/3 나올 예정이다.

① 각 당의 '비례 대표' 공천은 당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자 '당의 지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틀어 비례대표에 관한 규정은 둘뿐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다. 절반은 여성으로 추천하되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 19대 비례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54명이며, 새누리당 비례 신청자는 600여명, 민주당은 280여명이었다.

○ 3/24 비례대표 후보 20개 정당 188명 최종 확정 …경쟁률 3.48대1 보임. 새누리당은 4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이 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통합진보당 20명, 자유선진당 16명, 창조한국당 4명 순이다. 총 54개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188명이 경쟁하게 돼 3.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37.48%의 정당 투표율로 2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냈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은 25.17% 득표로 15명의 비례 의석을 가져갔다. 친박연대 8명(13.18%), 자유선진당 4명(6.84%), 민주노동당 3명(5.68%), 창조한국당 2명(3.80%)을 각각 차지했다. 당 득표율 2.94%로 비례대표 당선 기준인 3%에 아깝게 미달했던 진보신당은 당선인을 내지 못했다.

17대 국회	득표율	배분율	의석수
한나라당	35.8%	38.0%	21
민주당	7.1%	7.5%	4
우리당	38.3%	40.6%	22
자민련	2.8%	0.0%	-
민주노동당	13.0%	13.8%	7
기독당	1.1%	0.0%	-
기타	1.9%	0.0%	-
전체	100.0%	94.2%	54

18대 국회	득표율	배분율	의석수
한나라당	37.5%	40.7%	22
통합민주당	25.2%	27.3%	15
자유선진당	6.8%	7.4%	4
민주노동당	5.7%	6.2%	3
창조한국당	3.8%	4.1%	2
친박연대	13.2%	14.3%	8
기타	7.9%	0.0%	-
전체	100.0%	92.2%	54

② 나순자 비례후보 선거운동 본격 돌입

○ 3/5일 보건의료노조 집단당원가입식 (국회정론관)

○ 3/6일 나순자 후보 출마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 선대본 구성 (내부 와 외부로 나누어 선거운동 진행)
○ 지역 순회
○ 선거 홍보물 제작
○ 전화선거 유세
○ 문자 선거운동
○ 인터넷 선거운동 ; 웹진 제작

③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선출 경과

○ 청년 비례선출 먼저 진행되어 3/12 확정 공고 ;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선출 프로젝트 <위대한진출>의 최종 선출자는 기호1번 김재연 후보로 확정
- 투표결과 ; 유효선거인단 : 48,386명 - 총 투표수 : 19,756표 (투표율 40%)
- 무효 : 146표
- 각 후보별 득표수 및 득표율
기호1번 김재연 9,180 (46.4%) 기호2번 유승재 1,493 (7.5%) 기호3번 이윤호 3,411 (17.26%)
기호4번 김지윤 2,095 (10.6%) 기호5번 조성주 3,431 (17.3%)

○ 비례후보 선거는 전체 당권자 75,251명 (강원 1,897명 대구 1,591명 인천 3,828명 충북 1,327명 경기 16,635명 대전 1,712명 전남 5,066명 경남 5,795명 부산 3,812명 전북 4,593명 경북 2,956명 서울 12,157명 제주 2,889명 광주 5,205명 울산 3,764명 충남 1,930명 중앙 9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당원 총투표를 진행하였다.

○ 현장투표소 설치 현황(30인 이상 신청시 가능)

보건의료노조 현장투표소 설치 현황

지역본본부	지역위원회	현장 투표소
강원(1)	속초	속초의료원지부
경기(1)	구리	한양대구리병원지부
대구경북(2)	달서구	대구보훈병원지부
	수성구	대구시 시지노인병원지부
광주전남(1)	동구	전남대병원지부
전북(1)	군산	군산의료원지부
충북(1)	충주	건대충주병원지부
서울(13)	강동구	보훈중앙병원지부
	구로구	고대구로병원지부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지부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지부
	양천구	이화의료원지부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지부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지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지부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지부
	중구	제일병원지부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동작구	중앙대의료원지부
합계	20	

노동조합 현장투표소 설치 현황(보건의료노조 별도)

지역본본부	지역위원회	현장 투표소
강원(1)	강릉	민주연합노조 사무실
경기(3)	구리	민주노총 사무실
	의정부	민주연합노조 사무실
	화성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조조합
경남(2)	거제	대우조선노동조합
	사천	아이피쇼우드노동조합
경북(7)	경주	(주)에코플라스틱노동조합
		(주)IHL노동조합
		(주)광진상공 노동조합
		(주)다스 노동조합
	포항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 노동조합
		(주)동방 노동조합
광주(1)	광산구	광주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1)	달성군	대동공업
부산(1)	사상구	화물연대부산지부 북부지회 사무실
울산(1)	북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서울(1)	성동구	현대자동차 서비스 노동조합
인천(5)	부평구	GM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서구강화군	부성여객
	중동옹진군	현대제철노동조합 사무실
		동방기업노동조합
		아시아나공항서비스노동조합
전남(8)	광양시구례군	광양
		동방
		플랜트지부
		건설기계

		포스코 사내하청
		GICT
	순천시곡성군	플랜트지부
		하이스코
전북(8)	전주	현대차전주공장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지엠군산지회
		페이퍼코리아
	익산	일진머트리얼즈
		만도
		세큐리트
	완주	현대차전주공장
충북(1)	청주	OB 맥주노동조합
	청원	
합계	40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장애, 여성, 일반명부)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호1. 조윤숙(장애인명부) - 장애인 푸른아우성 대표 /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기호2. 박영희(장애인명부) - 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 전)진보신당 부대표

기호3. 강현석(장애인명부)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호4. 김수진(여성명부) - 전)열린우리당 강남구 당원협의회장 / 참여정부평가포럼 서울 공동대표

기호5. 윤금순(여성명부) - 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2005년 노벨평화상 후보

기호6. 나순자(여성명부) -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 보건의료노조 5대 위원장

기호7. 윤난실(여성명부) - 전)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전)진보신당 부대표

기호8. 오옥만(여성명부) -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1,2기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기호9. 황 선(여성명부) - 98년 대학생 방북 대표 /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기호10. 노항래(일반명부) - 전)열린우리당 정책실장 /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기호11. 윤갑인재(일반명부)-전국플랜트건설노조 1대,2대위원장/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치위원장

기호12. 김기태(일반명부) - 2004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 2009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기호13. 이석기(일반명부) - 현)㈜사회동향연구소 대표 / (전)㈜씨엔피전략그룹 대표

기호14. 이영희(일반명부) - 현)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초대 부위원장/민주노동당 초대, 3대 최고위원

기호15. 문경식(일반명부) - 전)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 전)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 3/21 최종 발표 ; 통합진보당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결과 공고

유효당권자 74,794명 중 41,672명(투표율: 55.71%)이 투표에 참여 (개표 결과표는 별첨)

통합진보당은 18일 선출투표를 마감했으나 이중투표, 부정투표 논란과 일부 후보의 반발 등으로 발표를 미루다가 3일후인 21일 비례후보 순번을 최종확정 공고함. 여성 비례 1위는 윤금순 전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이 선출돼 비례 1번을 배정받음. 윤금순 후보는 농민운동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을 거쳤으며 홍콩 WTO 세계투쟁본부장을 맡은 바 있음. 일반명부 비례 1위 득표를 한 이석기 후보는 비례대표 2번을 차지. 이석기 후보는 민중의 소리 이사와 CNP전략그룹 대표를 거쳐, 현재는 CNP 전략그룹의 계열사인 (주)사회동향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음. 비례 3번에 김재연(청년명부), 4번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5번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총장, 6번 박원석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7번 조윤숙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 8번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9번 오옥만 전 제주여민회 대표, 10번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11번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12번 유시민 대표, 13번 윤난실 전 진보신당 부대표, 14번 서기호 전 판사, 15번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16번 문경식 전 농민회총연맹 의장, 17번 박영희 전 장애여성공감 대표, 18번 강종헌 전 한통련 조국통일위원장, 19번 김수진 전 열린우리당 강남당협회장, 20번 윤갑인재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장을 배치함.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투표 '폭탄'안고 순번 확정 <참세상 3,22>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우리 노조 나순자 후보는

유효당권자 74,794명 중 41,672명(투표율: 55.71%)이 투표한 결과 총 4,491표 득표(온라인 2,965 + 현장 1,526표), 득표율 11.02% 로 여성명부 중 3위, 전체 15명 후보 중 4위, 10%대 득표자는 4명에 불과한 가운데 5위는 5%대 득표에 그침. 민주노총 출신 4명의 후보중에서 1위를 차지함. 그러나 비례후보 선출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비례 대표 순번은 11번을 받음

후보별 득표 최종 결과 (선관위 발표)

구분	1번 조윤숙	2번 박영희	3번 강현석	4번 김수진	5번 윤금순	6번 나순자	7번 윤난실	8번 오옥만	9번 황선	10번 노항래	11번 윤갑인재	12번 김기태	13번 이석기	14번 이영희	15번 문경식	무효 (기권)	합계
대전	0	0	0	0	0	3	0	2	5	1	8	3	1	0	2	0	25
부산	0	0	0	0	0	0	0	0	0	0	0	0	10	0	0	10	10
제주	1	1	0	0	23	0	0	25	1	0	0	0	1	0	0	4	51
충남	1	0	0	0	0	1	1	7	0	0	1	0	2	10	2	0	24
광주	0	0	0	0	0	4	5	9	2	0	0	1	49	1	4	0	75
강원	3	2	2	0	4	156	0	5	2	3	1	0	10	6	10	141	201
경기	16	5	2	2	29	175	2	5	2	0	6	7	585	15	20	100	855
경남	2	4	1	2	153	6	3	4	2	2	0	5	9	13	8	193	212
경북	2	3	2	4	83	0	2	1	1	2	25	1	63	74	8	380	269
대구	0	0	0	0	0	67	0	0	0	0	0	0	0	0	0	22	67
서울	10	145	6	4	52	1,008	3	5	1	4	17	1	22	45	7	70	1,320
울산	2	0	2	2	4	7	1	2	0	2	0	0	21	12	2	1	55
인천	2	2	1	0	49	0	33	2	0	3	0	0	34	59	3	0	186
전남	1	0	2	2	22	1	8	1	0	2	187	1	21	3	281	7	531
전북	17	11	6	12	100	45	9	2	4	4	6	12	206	30	20	1	467
충북	1	2	0	2	1	53	0	1	1	2	0	2	18	34	2	2	118
현장 합계	58	175	24	30	520	1,526	67	71	21	25	251	33	1,052	302	369	931	5,455
온라인	705	414	322	104	4,917	2,965	1,737	5,212	1,084	2,399	1,042	1,189	10,183	2,097	1,847	0	35,512
최종 결과	763	589	346	134	5,437	4,491	1,804	5,283	1,105	2,424	1,293	1,222	11,235	2,399	2,216	931	41,672
득표율	1.9%	1.5%	0.9%	0.3%	13.4%	11.0%	4.4%	13.0%	2.7%	6.0%	3.2%	3.0%	27.6%	5.9%	5.4%		100.0

④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 통합진보당 27차 공동대표단 결정사항 (2012. 3. 20(화) 15:00 / 국회 의정지원단

< 비례후보 인준의 건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후보 투표 결과 보고를 확인하고, 노항래 후보의 요청을 받아 일부 후보 순번을 바꾸는 내용(8번 이영희, 10번 노항래)을 대표단의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 비례후보 선출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는 모두 봉인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봉인된 자료는 총선 실시 직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 비례후보의 경우 진상조사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거나 순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 3/21 선관위 공식 발료후 나순자후보 선대본 선관위에 이의신청

1) 지난 1-2월 집단입당한 당원 중 무려 1,000명 가까운 당원의 당권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당사자의 실수로 인해 당권이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 차원에서 당원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권이 누락된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투표누락과 득표 감소에 따른 대책, 즉각적인 당권 회복을 요청드립니다.
2) 인터넷 투표 집계 결과, 우리 선대본 자체 집계와 선관위 발표와는 1,500표 차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표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인터넷 투표과정에서 당 투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당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가 접수되고있습니다.
3) 현장 투표의 경우에도 몇몇 병원에서 투표용지에 투표담당자 서명 혹은 도장이 없는 등 선거 실무진의 단순실수로 인해 수 십명의 투표가 무효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 따라서 기호 6번 나순자 후보 선대본은 이번 당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2,500표 -- 3,000 표는 여성비례후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수준이므로 위에서 제기한 3가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규명과 재검표를 통해 당원 관리와 선거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선거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제18차 회의(전자회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왔다.

- 귀 후보 측이 제기한 '당 비례대표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전면재조사 요청'에 대해 귀 후보 측이 제기한 양식에 근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1,000명 가까운 당원의 당권 누락 관련

-. 사례 1)~4) 관련,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음.

㉠ 당원관리시스템이 통합되지 않고 구)민주노동당과 구)국민참여당으로 각각 운영되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당직 재배치 등으로 인해 당원관리시스템 담당자가 두 개의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실수가 발생하였음.
㉡ 통합 이후 입당자가 2011년 12월 6,500여명, 2012년 1월 7,000여명, 2월 19,000여명에 달하였고, 당시 홈페이지와 당원관리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은 상태였

기에 홈페이지 입당, 팩스를 통한 입당 건을 일일이 당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일부 정보 기재 오류 등이 있었음. 이에, 입당 처리가 일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직접 납부는 광역시도당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광역시도당에서 입급자 파악 후 중앙당으로 납부 명단을 보고하여 중앙당에서만 등록 가능함. 이 과정에서 입금이 되었으나 정보 불충분 등의 사유로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건이 있었으며, 은행을 통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입금자를 확인 할 수 없어 직접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건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중앙선관위는 당권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 당원에게 문자로 안내하였고, 이의신청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당원관리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기 당비가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못한 당원들에게 추가 당권구제를 위한 당비 직접납부를 안내하는 등 최대한 당원들의 당권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만 예기치 못한 오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부 당권 누락자들이 발생하였음.
㉥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시스템 오류로 일부 누락자가 발생함. 당원관리 시스템이 통합되는 시기와 선거인 명부 작성 시기가 맞물려 누락된 당원에 대해 충분히 확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로, 중앙당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일체의 오류 없이 선거인명부를 처리하기는 어려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이 종료된 이후 투표개시일 직전까지 당권 누락에 대한 귀책사유가 당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구제하려고 노력하였음.

-. 사례 2)~4)까지 언급된 당권누락 등에 대해서는 입당원서의 정보가 미비했던 경우, 팩스가 흐리게 나왔던 경우, 광역시도당의 입금 확인이 지체되었던 경우, 홈페이지 통한 입당 과정에서의 홈페이지 오류 등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이유를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움.
-. 현재 홈페이지 입당과 당원관리 프로그램을 연동, 자동 등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당권 행사가 제약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후보와 보건의료노조 측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바람.

2) 인터넷 투표 과정에서 당 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검표 요청 관련
-.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2.03.20. 제27차 공동대표단회의 결정사항 중 비례후보 인준의 건에서 '총선 실시 직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결정이 있었는 바, 향후 있을 위 진상조사 결과 및 조치에 따라 갈음함을 양해 바람.
-. 다만, 구체적 사례 '2) 인터넷 투표 과정에서 당 투표 시스템의 오류로 판단되는 사례'의 사례 1)과 사례 2)에 관련해서는 해당 당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최대

한 파악하여 그 사유 등을 알려드리겠음.

당원의 인적사항(이름/소속 지역위/주민번호 등) 통보 시 사례 2-1)의 경우 해당 당원이 투표한 것으로 처리되었는지, 중복 투표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투표시각,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포함 파악키로 함. 사례 2-2)의 경우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투표시스템 관리업체를 통해 기술적 답변을 요청, 파악키로 함.

3) 현장투표 무효처리 관련

-. 현장투표에 있어 투표관리인의 서명 또는 도장, 투표용지의 꼬리표를 떼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바, 현장투표 실시 전인 2012.03.13.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공고](현장)투표소 시행 규칙'에 이러한 점을 명기하지 못하는 등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함.

-. 앞으로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⑤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선출 결과에 대한 외부의 시선

4·11 총선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딜레마 (윤효원)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전태일의 여동생을 비례대표 1번,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던 노동연구원의 연구자를 비례대표 3번에 배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될 것이 확실하다. 물론 전태일의 동생이라는 '혈연'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연구자라는 '학연'이 노동공약의 실현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노동 관련 후보를 1번과 3번에 전격 배치하면서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을 내세운 통합진보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가능권인 11번과 12번에 한국노총의 현역 간부 2명을 배치함으로써 노동의 색깔을 더욱 강화했다.

이들의 미래가 '조직 플레이'보다는 '원맨쇼'로 끝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된 한국노총 4인방의 운명과 다를지 같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선 확실권인 20번 안에 노동운동가와 노동 관련 인사를 4명이나 배정한 것은 분명히 파격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을 계승한다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배정을 보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당 안에서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드러난다. 1번이 농민, 2번이 중소업체 대표, 3번이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4번에 가서야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씨가 교육계를 대표해서 배정을 받았을 뿐, 5번은 환경단체 출신이고, 6번은 시민운동 출신이고, 7번은 장애인이다. 노동운동가인 이영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8번과 11번에 배정됐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가운데 당선 가능한 노동계 인사는 최대로 잡아야 3명이고, 확실하게는 1명뿐이다. 혹자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결과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선 가능권인 3·4·5·6·7번을 노동계가 아닌 다른 부문으로 미리 정해 놓은 점과 인터넷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인 행태를 볼 때 과연 현행의 당원투표 제도가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무라는 운동적 과제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당내 선거의 진행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배정에서 노동계를 '존중'했고, 통합진보당은 '무시'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매일노동뉴스 2012,4,9)

■ 3단계 : 총선 선거운동 시기 (3/29 ~ 4/11)

○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여소야대 국회를 위해 전 조직이 총력적으로 선거투쟁을 전개

○ 지역은 야권 단일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 정당은 기호 4번 통합진보당! 투표전략 선전

○ 무상의료와 보건의료인력법 실현을 위해 우리 후보 나순자, 전종덕을 국회로! 이은경 도의원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전개

<4.11 총선 주요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비고
3.22부터 3.2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3.23부터 3.27까지	부재자신고 기간	
3.28부터 4.2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3.29	선거기간 개시일	본 선거운동 기간
4.5부터 4.6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4.11	투표/개표	

① 4.11 총선투쟁을 통해 전략지역후보(전종덕, 홍희덕,이은경), 지역별 야권단일후보(30+20) 당선 노력과 정당 명부 투표 지지율 20% 올려서 나순자 비례후보 당선노력

○ 정당명부 투표율 20% 만들어 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나순자 후보 국회 진출
- 정당지지 400 만표 만들기, 노동 계급투표 조직, 당 비례후보 역할 강화
- 4만 조합원이 1인당 10명 투표 조직하기
- 조합원용 별도 리플렛 제작

○ 나순자 비례 후보 당 지지율 높이기위한 지원 활동

- 당 비례후보와 공동활동
- 개별적 지원활동 ; 3차 전국 순회 돌입
- 순자의 하루 로 소식 알리기

○ 본조 차원에서 전략지역 후보 집중 지원
- 우리노조 전략후보(전종덕, 홍희덕, 이은경) 집중 지원
- 지역별 야권단일후보 지원 (진보정당으로 단일화된 30곳 + 호남 완주지역 20개)
- 인력 파견과 지역본부별 순회 지원
- 지원 일정표와 역할 분담 ; 조직실

□ 지역구 선거운동 결합

- 4월 총선 기간 지역본부별 선거운동결합 일정

날짜	본조	지역본부	기타
3/29(목)		광전본부 / 전북본부 / 지역본부별 사무처간부1명	지역본부 조합원 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지역사무처 일정 조율 예정
3/30(금)			
3/31(토)		광전본부	
4/1(일)			
4/2(월)		충북본부 / 서울본부 일부	
4/3(화)			
4/4(수)		부산본부 / 경기본부 일부	
4/5(목)			
4/6(금)		울경본부 / 대경본부	
4/7(토)		광전본부	
4/8(일)			
4/9(월)		강원본부(4/8-9) / 대충본부 / 지역본부별 사무처간부1명	
4/10(화)		광전본부	

□ 경기도의원 보궐 후보 선거운동 결합

- 인천부천지역본부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집중한다.

□ 부재자 투표 조직

② 세액공제 모금 사업 적극 전개

③ 우리 요구 총선 정책 공약화 투쟁- 정책협약식

○ 4.11 총선 보건의료노조 정책요구 마련
○ 3/8일 서비스연맹과 정책협약식

○ 19대 총선 정책공약화사업 진행상황

의제	주체	대상	날짜	비고
총선정책	보건의료노조	통합진보당	2/7일	정책협약식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노조	287명 야당후보	3/27~29일	정책요구안 질의서
보호자없는 병원	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	민주통합당	3/22일	공문 발송
		통합진보당	3/22일	공문 발송
무상의료 실현	무상의료 국민연대	통합진보당	3/30일	정책협약식
		진보신당	3/30일	정책협약식
		민주통합당	총선후?	
총선정책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통합진보당 경남본부	3/8일	정책협약식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윤종군 후보(민주통합당)	4/4일	정책협약식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연세대원주의료원지부	김진희 후보(민주통합당) 송기헌 후보(민주통합당)	4/5일	정책협약식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4/5일	정책협약식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정호준 후보(민주통합당)	4/5일	정책협약식
공공정책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통합진보당		정책협약식
		진보신당		정책협약식
		민주통합당	4/3일	정책협약식

○ 야권후보 287명에게 8대 보건의료정책요구 공약화 질의서 발송
- 보건의료노조는 3/27일(화)~29일(목) 19대 총선에 출마한 야권후보 287명에게 보건의료정책요구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총선정책요구를 공약화할 것을 요청함.
-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 실현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50만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확충 ▲돈벌이 경쟁과 과잉진료 부추기는 의료공급체계 혁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무상예방접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노인틀니 무상제공, 지역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충족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보장 확대 등 8가지 보건의료정책요구안을 마련하여 통합진보당 55명, 진보신당 23명, 민주통합당 209명 등 총 287명의 야권 후보에게 전달함.
- 답변서 보낸 곳

▪당선자: 문병호(인천부평갑), 박남춘(인천남동구갑), 김경협(부천원미갑), 설훈(부천원미을), 이미경(은평갑), 유대운(강북을), 노회찬(노원구병), 박홍근(중랑구을), 이인영(구로구갑), 최재천(성동구갑), 김한길(광진갑), 서영교(중랑구갑), 정호준(중

구), 전병헌(동작구갑), 김영주(영등포갑), 전우홍(제주시을)

▪낙선자 : 이근선(인천 연수구), 김성진(인천남구갑), 신동근(인천서구강화군을), 조순용(용산구), 천호선(은평을), 김종길(창원시진해), 홍순우(통영시고성군), 손석형(창원시성산구), 하귀남(창원시마산회원구), 이선호(울주군), 김진석(울산남구을), 문성현(창원시의창구), 김창현(울산북구), 조현제(밀양시창녕군), 박민웅(의령군함안군합천군), 김성진(창원시마산합포구), 권문상(거창군함양군산청군), 김우남(제주시을), 정균환(송파구병), 천정배(송파구을)

④ 의료영리화 추진 의원 심판운동

○ 무상의료 국민연대 차원에서 의료영리화법안 추진 의원 33명 낙선자 명단 발표

이름	지역	정당	18대 제출 법안	비고
강석호	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	새누리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권선택	대전 중구	자유선진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권성동	강원 강릉	새누리	2010.9.7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새누리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김을동	서울 송파병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	서울 중랑갑	새누리	2010.9.7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경기 고양덕양구을	새누리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김태환	경북 구미을	새누리	2010.9.7 경제자유구역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	새누리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관한 특별법안	
변웅전	비례4번	자유선진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대표발의)	대표발의
서상기	대구 북구을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	경기 부천 원미을	새누리	2011.8.16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대표발의)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대표발의 대표발의
신영수	경기 성남 수성구	새누리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안양 동안구을	새누리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안효대	울산 동구	새누리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	부산 서구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대구 동구을	새누리	2010.9.7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일호	서울 송파을	새누리	2011.8.16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인천 남구을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규	대구 북구갑	무소속	2010.9.7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대표발의
이재선	대전 서구을	자유선진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이진복	부산 동래	새누리	2010.9.7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이학재	인천 서구강화군갑	새누리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이한구	대구 수성갑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대표발의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	대전 동구	자유선진	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2009.3.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희	경기 광명을	새누리	2008.10.22. 의료채권법제정 발의 (보건복지부장관) 2010.4.8.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장관) 2010.5.18. 제주도특별자치법도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2008.8-2010.8)
정수성	경북 경주시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경북 영천시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	대구 달서병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29.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홍사덕	서울 종로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홍일표	인천 남구갑	새누리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2010.3.19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16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우여	인천 연수구	새누리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대표발의)	대표발의

○ 4/4일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2012총선넷)가 <2012총선, 심판명단 종합발표 및 집중 낙선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심판대상자 140명 명단 발표

정당 기구	한미 FTA 범국본	4대강 범대위	정교 분리 넷	조중동 방송 저지넷	역사 정의 실천 연대	핵없는 사회 공동 행동	전농 철도 노조	재개발 개혁 포럼	무상 급식 연대	중소상 인넷	무상 의료 연대	민주 노총 외
새누리당	80	30	1	80	16	10	1	0	4	9	28	2
민주통합당	3	0	1	2	1	1	0	0	0	0	0	0
자유선진당	1	0	0	0	0	0	0	0	0	0	4	0
국민생각	1	0	0	1	0	0	0	0	0	0	0	0
무소속	8	6	2	12	2	0	0	1	0	0	2	1
계	93	36	4	95	19	11	1	1	4	9	34	3

○ 민주노총에서 4/5일 <민주노총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11명> 명단 발표

▫ 손숙미(새누리당 / 경기 부천시 원미을) : 2011년 8월 16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1년 4월 29일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대표발의. 2010년 5월 17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공동발의. 3차례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중 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의 '청부' 발의자 역할.

▫ 황우여(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 : 2010년 3월 19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08년 11월 5일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대표발의. 2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이중 영리병원 규제완화에 대한 법률을 대표발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황우여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⑤ 투표권 보장투쟁

○ 4/6일(금) 10:00 병원협회, 11:00 의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하여 “4월 11일 총선은 오후 8시에 마감되는 보궐선거와는 달리 투표가 오전 6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고 평소처럼 출퇴근하면 사실상 투표참여가 어렵다”며,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이지만,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의 노동자나 임시공휴일을 실시하더라도 교대근무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임시공휴일을 지키도록 할 것과 ▲교대근무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것을 공식 요청함.

○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4월 7일(토) 12:00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유지현 위원장과 현장 노조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포식>을 갖고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후보 낙선 및 의료공공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에 앞장설 후보 당선 투표운동 전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보장운동 ▲국민의 삶과 건강권을 팽개친 세력들에 대한 심판투표운동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19대 총선에 출마한 야권단일후보의 승리와 나순자 비례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 조합원 투표운동 등 4가지 내용의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언문>을 채택함.

○ 보건의료노조는 4.11 총선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4/9일(월) 인천성모병원에 4.11 임시휴무일로 지정하여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 4/6일 우리 노조 산하 지부가 있는 140여개 병원의 임시휴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성모병원만이 유일하게 정상근무하고, 7개병원이 반휴를 실시하며, 나머지 병원은 임시휴무할 계획임을확인함.

■ 총선 결과

○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인 152석을 차지해 야권 연대를 누르고 압승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25석을 포함해 152석을 얻었으며, 민주당은 127석(비례 21석), 통합진보당은 13석(6석), 자유선진당은 5석(2석), 기타 무소속은 3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득표율도 새누리당이 42.77%로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 36.4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은 3.23%를 득표했다. 진보신당은 1.13%, 녹색당은 0.48%에 그쳐 두 당은 의원을 배출시키는 데 실패하며 당은 해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전체 투표율은 54.3%였다.

○ 통합진보당은 지역구에서 호남 3, 경기 2, 서울 2곳에서 당선되었다. 반면 통합

진보당의 전략지역이었던 경남 창원 거제와 울산에서 전멸했다. 정당 지지율 또한 내부적으로는 17대 총선의 13%를 넘어 15%를 전후한 지지율과 8석~10석을 넘는 비례 당선자를 기대했지만 기대에는 많이 미달한 10.3%에 그쳤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 지지층 노동자에게 당이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영남권 노동벨트'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당 비례 선거에도 노동자후보가 4명 출마했지만 1명 당선되는데 그쳤다.

○ 내부적으로는 나순자 후보의 경우, 통합진보당이 10.3% 정당 득표로 비례 6번까지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실패했고, 전종덕 후보(나주 화순) 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막판 사퇴하면서 야권단일후보 승리에 기여했다. 부천시 제 6선거구 보궐선거에 나선 이은경 경기도의원 후보는- 11,795 표(19.90%) 라는 높은 득표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민주통합당 김종석, 새누리당 강일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 평가

1) 보건의료노조 총선투쟁을 중심으로 한 평가

-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①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폭발적인 조합원의 참여속에 4,500 여명 집단당원가입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② 4,500 조합원이 새로이 집단당원 가입을 하고 기존 당원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당원이 5,500명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비례선거에서 4,491표 밖에 얻지 못했는지? ③ 비례후보 선거에서 전체 15명 후보중 전체 4위, 민주노총 노동후보 4명중 압도적으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비례후보 11번을 배정받게 되었는지? 등이 주요하게 평가되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당과 민주노총의 역할도 같이 점검되어야한다.

■ 성과적 측면

○ 산별운동을 선도해온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 한국 최초의 산별노조 건설, 2004

년 산별총파업으로 산별교섭시대 개막에 이어 또 한번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정치적 실험에 나서면서 의미있는 산별활동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노조 정치활동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 이번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조합원들의 잠재된 정치적 에네르기를 하나로 모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4년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한 산별총파업투쟁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현장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정치활동이 단지 정치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직 강화에도 기여하였으며, 30명 이상 당원 가입을 시킨 지부도 무려 42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지부가 함께하면서 조직강화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이번 총선투쟁을 통해 현장 조직력이 약화되고 정세가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지도부가 인력문제등 현장 요구를 중심으로 좋은 투쟁과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합원은 움직인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런 정치활동을 통해 현장 조직을 강화하고 산별 조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장 많은 당원이 가입한 서울본부의 경우 지역본부와 지부 조직강화와 분위기 결집에 좋은 계기가 되면서 대약진하였다. 좋은 의제를 내세우면서 조합원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조직한다면 이 또한 파업투쟁 이상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물론 현장 조직강화와 산별의 위상의 높이는 주요한 노조 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정치적 힘과 저력, 무상의료 실현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라는 보건의료노조 주요 의제와 우리 후보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내부 조합원 당원 득표를 기본으로 타 산별, 지역 지지를 모아 4,4,91표를 득표하였다. 첫 도전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기존 당내 정파 질서와 기득권 구도의 벽을 넘어 여성명부 3위, 전체 15명중 4위 득표를 하였다. 여성 1위와의 표차는 2.4%, 946표이다. 민주노총 4명의 노동후보 중에서는 최대 득표를 하였고, 2위와도 2배 이상 표차가 벌어졌다. (예상보다 낮게나온 투표 최종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당 선거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기존 당과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원없이 독자적인 행보로 획득한 이 표는 이후 보건의료노조가 의미있는 제도적 정치활동을 하기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 도의원 출신인 전종덕 후보 (나주 화순) 는 지역선거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나 막판 선거운동기간 사퇴하여 야권단일후보가 승리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 보궐선거에 나간 이은경 후보 (경기도의회) 는 끝까지 완주하여 19%를 득표, 이후 지자체선거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 한계적 측면

▶ 대외적 요인(제도적 요인)

1) 당 비례후보 선거제도의 불합리한 모순과 문제점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 이후 대중조직의 진보정당 참여와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어야한다.

① 당 비례후보 선거제도에는 당의 노동중심성을 세우고 당이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그 어떤 기본전략도 없었다.

- 당이 진성당원제로서 당원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명부 3 + 청년 1 + 장애 1명> 을 당선권에 우선 배정함으로서, 결국 무려 50%를 비경쟁 후보로 비례후보로 배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후보는 1위 아니면 9위가 되는 이상한 선거제도가 형성되어, 전체 경쟁부문 15명 중 4위를 했음에도 불구라고 11번을 받게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노동계 출신 후보 4명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당선권밖으로 배정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진보정당으로서 노동자 농민 중심성이 전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외부 30% 개방과 청년, 장애를 우선 순번에 배정하는 것이 과연 진보정당의 원칙에 맞는지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선거 방식은 결국 진보정당으로서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비례선거결과는 당 내부 주력부대인 노동자들의 표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당의 외연확장에도 별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참고로 2004년 당 비례후보선거때는 개방명부제도가 없었고 2008년에는 분당사태이후 3명의 전략명부를 도입했다. 이후 비례선거제도 개편시에는 당 논의 초기 전국운영위에서 제기되었던 노농을 중심으로하는 전략비례후보 우선배치론 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이런 선거기준 조차도 선거 개시전에 확정되지 않아 선거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주었고, 청년 비례선거는 여성후보가 1위를 하면 3번을 주고, 남성후보가 1위를 하면 8번을 주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다.

② 진보정당으로서 온라인과 현장투표소 투표관리시스템과 선거관리능력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결과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 당의 미흡한 당원가입 접수와 선거관리로 인해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 1,000여명이 당권누락으로 투표를 못하게 되었고, ▷자체 집계보다 낮은 인터넷 투표결과가 나왔으며 ▷당 선거관리의 미흡으로 일부 현장투표가 무효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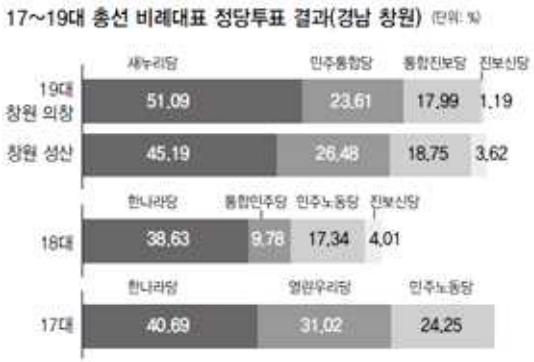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소중한 2,500표~3,000표가 이번 투표결과에 제대로 반영 되지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표차는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여성 1위를 할 수 있는 표이다.

- 수의계약한 인터넷 업체에게 모든 선거관리를 맡기면서 선거기간 소스코드에 들어가는 등 신뢰성에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현장투표 또한 현장선거관리 미흡으로 크고 작은 선거관리의 허점이 드러냈다. 당이 커지면서 기존의 선거시스템과 당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당 차원에서 정당투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의지가 부족했다.

○ 정당 지지율 20% 확보는 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 당은 내부적으로는 17대 총선의 13%를 넘어 15% 이상의 지지율로 10석을 전후로 한 비례 당선자를 기대했지만 기대에는 많이 미달한 10.3%에 그쳐 비례후보의 국회진출이 6번에서 멈추었다. 더불어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실패했다. 10.3%는 선거운동 본격 돌입전(11%)과 거의 차이가 없는 지지율이었다. 선거기간 운동이 지지율 확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정당투표 지지율이 낮게나온 것은 진보신당 등과 진보통합 미완성으로 진보정당 분열속에 노동자층 방관과 냉소. 민주노총 방침의 구속력 약화와 계급투표 전략의 한계, 이런 분위기에서 김영훈 위원장과 지도부 현장 투표 독려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 그리고 당 차원에서 통합진보당을 알리는 목적의식적인 사업이 절대적으로 미흡했다. 야권 연대를 위해 대다수 지역에서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후보가 없는 지역은 당 지지운동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박빙의 상황에서 당선을 위해 민주통합당 지지를 흡수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선거운동원이 보라색이 아닌 노란색 복장을 많이 입었다. 결국 보라색을 통해 당의 독자적 정체성과 의제를 목적의식적으로 알리는 선전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공중전으

로 당의 차별성을 알리는 선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야권단일후보 지지 중심의 선전에 더 집중하면서 당의 독자적 차별성을 부각시켜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당 지지율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 당 비례후보의 면면을 볼 때 대중적 인지도와 상징성이 높거나 조직력에 기초한 후보가 부족하여 비례후보 중심의 선거운동이 한계에 부딪쳤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당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비례후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당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비교되는 대목이다.

3) 과도기라는 시기적 특성과 공조직 약화, 의견그룹이 주도하는 당의 내부 질서 하에서 산별조직, 대중조직이 당에 들어설 공간이 매우 협소했다.

○ 당의 노동중심성 강화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볼 때, 4,500명 집단 당원 가입과 자신들의 의제를 실현하기위한 후보 출마와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모델은 노조의 진보정당 참여 관련해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이런 모델이 성공했다면 통합진보당의 노동중심성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많은 노조와 의견그룹들이 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집단입당 조직에 대한 조직적 배려와 지원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지역연합 구조로 운영되어온 당의 입장에서는 산별단위의 집단입당에 대해 전략적 고려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오히려 3조직이 합쳐진 과도기라는 이유와 개인 당원 점검시스템이라는 원칙하에 새롭게 집단 입당한 4,500 조합원이 당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본 안내를 받지못하고, 노조 주도하의 집단당원관리와 집단 당 사업을 어렵게 하였다.

4) 70만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당 통합운동과 10만 당원 확대사업을 벌였지만,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집단입당사업과 후보 출마를 둘러싸고 조직적 지원을 물론 당에 대한 정치적 개입력에 있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 3조직 통합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당 창당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내부 논란 끝에 조합원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진보당 지지를 선언했지만 실제 당에 대한 조직적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당 비례에 출마한 노동후보 단일화 조율과 당선을 위한 노동자 표 결집 등 어떠한 조직적 지원활동도 불가능했다. 기존 민주노동당 당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번 비례선거에서 민주노총 출신 4명의 후보에게 던진 총투표 숫자가 9,000표 미만 (총 당권자 74,794명) 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대내적 요인

○ 내부 조직력의 한계와 편차가 정치활동 영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2011년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대통합을 내걸고 집단당원가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진보대통합이 미완의 형태로 마무리되면서 내부 주체적으로 충분한 평가와 준비기간을 가지지못한채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집단당원가입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규 당원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가입 전후로 내부 당원 조합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 집단 입당 후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등이 치밀하게 점검되지 못하면서 1,000여명 이상 당권(투표권) 누락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조직이 노조 중앙 일정과 현장 일정 등과 겹치면서 100% 투표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교대근무자들의 투표 독려와 온라인 투표 점검이 쉽지 않았다.

○ 당이 지역연합 중심의 구조이고, 1인 1표 투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견그룹 중심의 집중투표 관행으로 인해 산별 대중조직 대표로서 우리 후보가 전국 지지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3. 이후 과제

1)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남겨진 과제

① 4.11 총선투쟁에 대한 조직적 평가를 기초로 이후 과제를 도출한다.

○ 4/13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경과보고, 4/25 중집 토론을 시작으로 이번 선거 관련된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조직적 평가와 더불어 이후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기위한 현장토론을 진행한다.

○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그동안 진행된 경과와 관련 자료를 총화하고, 종합평가 자료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이번 과정에서 특히 열심히 당원가입사업을 한 지부와 지역후보가 출마한 지역본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이후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과제를 도출한다.

○ 후보는 낙선 사례 등 조직적으로 현장 인사와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② 새로운 정치적 도전으로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에네르기를 자산으로 삼아 제 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근본적으로 재모색한다.

○ 이번에 확인된 조합원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열의와 열망, 인력법 등 현장 요구 실현을 위한 정치적 에너지 응집,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우리 후보들의 도전정신을 소중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되, 이것을 제외하고는 열린 자세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청산주의적, 패배적 관점은 경계해야한다.

③ 이후 본격적인 노동자 정치 활동을 위한 내부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

○ 본조 정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면서 지역본부 - 현장지부를 잇는 정치담당자를 반드시 선임한다.
○ 일상적인 노조 정치활동을 강화하면서 2014년 지자체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예비후보를 발굴하고, 본조 차원에서 지역사업과 지역연대활동, 생활정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조합원 당원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소통구조를 강화한다. DM 등 현대화된 당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원명부 DB화. 여론조사 등 선진화된 당원관리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 간부. 조합원들의 정치교육을 강화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본 개념, 정치와 정당, 국회, 투표 방식과 참여 등 기본교육부터)
○ 교대제 근무 조합원과 선거날 입원중인 환자, 간병인들의 투표 참가와 투표율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④ 비례후보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과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다.

○ 청년 비례선거와 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 당권 누락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면재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4/12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조준호 대표를 비례대표후보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참여를 희망하는 관계 후보측 인사를 추천받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4/17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진상조사 관련 최종보고는 5월 3일 예정되어있다.
○ 노동중심성 강화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존 비례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당 차원에서 당원 및 당권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노조차원 집단 당원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한다.

⑤ 선거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조직적 대응을 강화한다.

○ 이번 선거기간 선거 포스터 부착과 훼손, 선거운동 방식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 참정권 원천봉쇄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⑥ 보건의료인력법 등 핵심요구 법안 발의를 위해 차선책을 모색한다.

○ 무상의료법, 보건의료인력법, 공공의료 강화 등 이번에 우리 후보가 주요하게 제기한 새로운 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통합진보당 보건복지위원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교수 등 이 법안에 관심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적극 추진한다.

2) 전체 노동운동에게 남겨진 과제

▶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되듯이, 우리가 노동자와 국민을 탓할 수 없다. 노동자, 국민들에게 진보정치의 힘과 가능성을 알리고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통해 제 2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준비해야한다.

① 다시 문제는 '노동운동' '민주노총' 이다.
-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강화 없는 당 노동 중심성 강화 기대는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

○ 통합진보당 선거운동 기조속에 노동은 없다(?) 아니 굳이 필요없다(?)
- 당 선거전략은 진보대통합보다는 민주당과 야권단일화를 통해 1:1 구도를 만들면서 수도권, 호남권 등 지역 돌파전략을 기본기조로 하고 있으며, 노동중심성 강조없는 비례선거제도를 통해 비례후보를 확정하였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서 13석을 획득하고 제 3당이 되었다. 당 선거운동기조에서 노동은 돈과 몸만 대면 된다(?) 는 인식과 노동의 독자적 역할이 특별히 별도로 요구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당 차원에서 노동의제를 띄우면서 노동자 계급투표 조직을 위한 공중전 기획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보아야할 점은 당의 노동중심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이 13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 3당으로 약진했다는 점이다. 노동의 참패와 당의 약진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이다.

○ 통합진보당의 노동중심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결국 관건은 민주노총 강화, 노동운동 활성화를 통해 당에 대한 조직적, 집단적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다.
- 일부의 주장처럼 당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민주노총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그 문제의식과 의욕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실제 민주노총당 건설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다른 왼쪽엔 진보신당과 녹색당이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 문제의식과 열정을 민주노총 자체를 강화하는 데 쏟아 붓는 것이 우선이다. 즉, 노동정치의 1차 근거지인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당에 집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주노총과 당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정파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하며, 실천적 대중사업으로 산별연맹별로 당에 집단입당사업과 이를 통한 노동자 요구 중심의 당 활동 의제설정, 각종 투쟁과 실천 활동에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당의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는 논쟁이기도하지만 당에 먼저 노동중심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당내 노동자 당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전 노력이 병행되어야한다.

- 하지만 자칫 '노동중심성' 이란 단어가 타 계급계층에 대한 과도한 우월의식과 배타적 권리주장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에 있어서 노동중심성과 노동존중은 문자 그대로 당 활동과 당 의제 설정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천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조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잘 수렴하고 당 활동의 중심에 세워나가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져야한다. 특히 노동은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간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 제 2의 산별노조운동과 결합된 제 2 정치세력화운동으로 나아가야한다.

- 제 2 산별노조운동이 제 2 정치세력화운동과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즉, 산별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과의 최적화 조합을 찾아야한다. 사실 진보정당간의 결합이 '강-강'으로 좌 클릭되거나, '약-약' 으로 우클릭하는 조합으로 간다면 최악의 조합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모험주의, 맹동주의로 흐르거나, 어용화, 개량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그럼 현실 정치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산별노조와 진보정당간의 전략적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유연하고 대중적인 독자 진보정당' 과 '계급적이고 강력한 통합 산별노조'가 최적의 조합이라 판단된다. '유연하고 대중적인 독자 진보정당' 으로 가는 흐름에 대해 좀 더 왼쪽으로 가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계급적이고 강력한 통합 산별노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노동조합이 좀 왼쪽으로, 좀 더 계급적이고 더 강력한 통합산별노조를 만드는데 힘을 쏟는 게 우선이다. 최근처럼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존재감이 왜소하게 보인 적이 없다. 빨리 민주노총 강화와 더 계급적이고 강력한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말로만의 노동중심성이 아니라 실력으로 입증하는 노동중심성이 담보되는 진보정당을 세워야한다. 그 힘을 통해 균형감 있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진보기관차를 만들어야한다.

② 계급투표 조직화, 노동자 투표율을 높이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참정권을 가로막고있는 각종 장벽을 없애고 근본적으로는 정당명부투표제 전면확대가 정답이다.

○ 이번 총선 투표율이 54% 로서 보수층은 결집하였으나, 노동자 및 20-40 세대

결집이 안되어 투표율이 낮아지고 결국 패배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2030 청년 세대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탓인가? 투표율 54%는 선진국형인가? 물론 그런것은 아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투표율과 복지수준과 노조 조직율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은 크게 북유럽형과 미국-한국형으로 나눠진다. 북유럽의 경우 투표율이 80%대를 유지하고 복지 수준도 높고 노조조직율도 60 - 70% 유지하고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경우 투표율도 40%대이고 사회복지수준도 높지않고, 조직율도 1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럼 북유럽국가 처럼 '투표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OECD 국가와 비교해본 선거 투표율

●OECD 주요 회원국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국가	투표율(%)
호주	95
룩셈부르크	92
벨기에	91
이탈리아	81
네덜란드	80
독일	78
노르웨이	77
그리스	74
일본	67
영국	61
프랑스	60
미국	48
한국	46
OECD평균	70

-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비교

국 가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스웨덴	68.3	90+
핀란드	67.5	90+
오스트리아	28.9	95+
프랑스	7.7	90+
이탈리아	33.4	80+
독일	19.1	68
영국	27.1	30+

캐나다	27.1	32
미국	11.9	14
호주	18.6	80+
일본	18.2	15+
한국	10.3	10
OECD 평균	29.2	60(64)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2009)

계급투표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 먼저,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통합 진보정당, 노동자 중심 진보정당을 강화한다.

○ 현재 냉소적인 활동가와 현장 노동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재구성에 적극 나서야한다.

▶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수 있는 의제 개발과 이슈화를 적극 추진한다.

○ 야권단일화, MB 심판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 가기위한 대안적 구호, 계급적 구호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일자리, 노동시간단축, 보건의료인력법 등 현장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를 적극 이슈화해야한다.

▶ 노동자 투표를 가로막고있는 현행 관행 고발과 참정권 보장 운동을 전개한다.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발받은 경우가 전무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이런 조항 자체를 알고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병원등 교대근무사업장,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일용노동자, 택배등 운수업종을 집중 감시대상을 선정하여 위반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한다. (민주노총 노동자 참정권 보장운동)

○ 보건의료노조는 선거기간중인 4/7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동자 참정권 보장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 일환으로 병협, 의협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정권 박탈 사업장을 조사하여 적극 대응해나갔다. 이런 움직임이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특히 선거기간 정상근무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정명령과 감독이 필요하다.

○ 노동자 투표율을 높이기위해서는 병원 등 3교대 근무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보건의료노조 자체 조사결과 조합원 총선투표율이 10%에 불과한 충격적인 결과 확인하고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집중적인 교육홍보 활동으로 투표율을 60% 대로 상승시켰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 의료기관의 총 입원병상수가 40만병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입원중인 환자와 이를 돌보는 간병인 포함하면 최소 40만 병상 + 20~40만 간병인, 즉 60~80만명이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선거당일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당일 근무하는 병원노동자 20만명 이상이 투표를 못하면서 대략 80~ 100만명 이상이 자신이 처한 특수한 조건과 근무형태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교대근무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D번(오전근무) 근무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다. 투표 시작전 새벽에 출근하고 근무후 업무 인수인계가 끝나면 오후 4 - 5시가 되므로 투표소가 있는 집 근처까지 가기 전에 투표 시간이 종료되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N번(밤근무)도 대다수가 전날 밤 근무를 끝나고 다음날 오전에 퇴근하게 되면 피곤해서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 대안으로 부재자 투표 기준(2,000명) 완화, 투표시간 연장(오후 8시까지)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 의무투표제(벌금제), 전자투표 도입, 투표시간 연장 등 법 제도적 개선책을 적극 강구한다.

○ 의무투표제(벌금제) 도입 ; OECD 국가 '평균투표율' 이 70% 이상인 나라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일찌감치 1925년에 도입해 투표안하면 20달러에서 50달러의 벌금을 매기는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전자투표방식 도입 등 투표 방식을 보다 더 쉽게 만들어서 투표 참여율을 높여야한다.

○ 투표 인증샷 놀이, 투표 확인 후 인센티브 주기 등 투표율 높이기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단기적 대책으로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노력' 이 병행되어야한다.

▶ 정당명부투표제 비례의석 전면 확대가 근본적인 대안이다!!

○ 정당명부 비례투표제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군소정당,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사표심리를 방지하여 투표에 기권하는 걸 막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

○ 잘 알려진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 후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승리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다. 네덜란드는 100% 비례대표제이고. 독일 일본은 의원의 50% 40%가 비례대표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아예 없다. 우리나라는 18%(300석중 54석) 정도이다.

○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투표율을 낮추고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 막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울산에서 얻은 총 득표수는 26만2천250표로 전체 유효투표수의 54.43%였으나, 6개 의석을 모두 가져갔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12만5천420표(25.99%)를 얻었으나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낙선자 정당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대표자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대중적 정서에서도 선거제도만 바뀌면 진보정당의 의석점유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투표를 조직하고 진보정당의 성장을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프랑스와 같은 결선투표제나 독일과 같은 높은 비중의 비례대표제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③ 뼈를 깎는 쇄신과 성찰로 진보정치의 재구성, 제 2기 진보정치시대를 준비해야한다.

○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이후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창당까지 10년간 제 1기 진보정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제 2기 노동자 진보정치의 도전이 시작되고있다. 민주노총은 2011년 일관되게 진보대통합운동을 주도적으로 제기해나갔지만 미완의 통합에 그쳤다. 그리고 이번 선거방침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투표를 천명했지만 당에 대한 조직적 개입력 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진보신당 지지 조합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 총선이 노동정치의 참패로 끝난 이 시점에서 당의 노동중심성 강화와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도는 무엇인지 다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일한 대안인가? 많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있지만 자체적으로 노동중심성 강화와 내부 혁신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어렵다면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새로운 민주노총당 창당인지 아니면 또 한번의 진보대통합 추진인지? 가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의 재구성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1차 시험대는 비례후보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당의 쇄신 노력 여부,

연이어 진행될 5~6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광역시도당 위원장, 각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 당직선거이다. 이번 통합과정과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당내 다양한 모순과 문제들이 이번 당직 선거를 통해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나갈지에 따라 당에 대한 노동의 지지와 참여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④ 4월 총선패배를 교훈 삼아 12월 대선 '대역전승'을 준비해야한다.

○ 4월 총선 패배를 쓴 약으로 해서 12월 대선 승리를 준비해야한다. 의회권력 교체는 실패했지만 행정부 권력은 반드시 교체해서 진보정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한다. 대선은 '도미노론'이 아니라 '지그재그론'이 되도록 해야한다.
○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의 투쟁과 80만 민주노총 투쟁을 동시에 준비하고 대선의제를 공동으로 준비해야한다. 보수(이념)-영남(인구)-돈(재벌)-언론(조중동)이 결합한 '카르텔' 의 위력을 뛰어넘어서는 전략과 대안이 나와야한다.

⑤ 다시한번 언론과 언론노조, SNS의 역할에 주목해야한다.

○ 나꼼수, SNS, 방송사노조 파업이 '조중동 - 공중파방송 카르텔' 을 이기지 못했다.
-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원동력은 언론장악이었다. 구름처럼 인파가 몰리는 박근혜 대표와 몇몇사람과 악수만하는 한명숙 대표가 방송화면에 대비되었고, 간간히 북 미사일 발사 준비 소식을 전하면서 보수세력을 자극하는 북풍을 이어갔고, 김용민 막발 발언을 연일 떠들면서 mb 심판구도를 김용민 심판구도로 몰고갔다.
- 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김용민의 막말 때문이 아니라 조중동이 조작해낸 '막말 프레임'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처방은 조중동 및 공중파방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한다.
- 참고로 작년 8월 한국ABC협회가 2010년도분 부수공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조선의 발행부수는 181만112부(이하 유가부수 139만2천547부), 중앙은 발행부수 131만493부(98만3천49부), 동아는 발행부수 124만8천503부(86만6천665부)를 인증 받았다. 국내 신문 발행부수에서 100만 부가 넘은 곳은 이들 3곳뿐이다.
- 선거이후 MBC, KBS 등 방송사노조 파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

○ SNS 만능론을 경계한다 : 긍정론과 자성론
- SNS, 트위트가 대안언론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선거판세를 바꾼다고 했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명제이지만 이번에 수도권 바깥지역에선 통하지 않았다. SNS 여론에 매몰되어 전체 판세를 읽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대두되고 있다.
- SNS 분석 전문가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이번에 SNS 투표독려 양과 단순리트윗은 늘어났지만 다중지성, 쌍방향 토론은 생략되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SNS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지만 ‘SNS에서 의제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꿰뚫고 의제를 먼저 제기하고 만들어갔다.” 고 분석, 진단한다. 우리끼리만 무미건조하게 리트윗되는 여론. 여론지형의 승기를 잡고도 조중동에 패한 이유다. 아무튼 ‘좋아요’만 누르고 댓글없이 뺑뺑이 도는 SNS 활동이 아니었는지... 대안이슈를 오프라인으로 구전전파 하지 않고 자족적으로 지내오지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한다.

- 김익현 아이뉴스 21 기자 등 일부 전문가는 집단 극단화 (group polarization) 현상을 경고한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즉 끼리끼리 더 보수화되고 더 진보화되면서 외부 전파력 한계를 노출하게된다는 것이다. SNS는 만능이 아니다. SNS를 많이 쓴다고 해서 잠자고 있던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열광시킨 건 '메시지'와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는 그 메시지의 전파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줬을 따름이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SNS의 '집단극단화'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느낌'을 전파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룹드(Grouped)' 저자인 폴 아담스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끝>

<참고자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부장, 현장 간부 동지 여러분!
지난 1월부터 4월 11일 선거 당일까지 4•11 총선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힘을 다해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실패했고,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 실현과 보건의료노조 출신 나순자, 전종덕 후보 국회 입성도 아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은경 후보의 도의원 도전도 20% 가까운 득표를 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당지지율이 10.3%에 그치면서 4명의 노동자 비례후보 중 단 1명만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고, 노동자 도시이자 진보정치 1번지라고 했던 울산, 창원에서도 단 1명의 노동자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하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으면서 제 3당으로 약진했지만 노동정치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번 4•11 총선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대리정치에서 직접정치를 선포하고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시도했던 우리는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우리의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는 구체적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조 간부•조합원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법•제도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모아 4,500여명이 통합진보당에 집단가입했고, 선거기간 내내 많은 간부들이 현장과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정치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현장 조직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강화됐습니다.
이제, 총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번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조합원의 열망과 조직적 성과를 밑거름으로 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앞에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12월 대통령 선거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12월 대선과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기필코 승리를 쟁취해야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교훈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노동자 정치를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노조와 민주노총이 먼저 힘을 가져야 노동자중심성이 확보되는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13일 전국 지부장 및 전임간부 연석회의를 통해 4•11 총선투쟁 경과를 보고하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후 노동자 정치활동의 올바른 방향과 기조를 토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과제인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노동자 정치활동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개월 아름다운 정치적 도전을 펼쳤던 나순자, 전종덕, 이은경 후보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당원가입부터 선거운동까지 헌신적으로 함께한 많은 지역본부장, 지부장, 간부, 대의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이 어렵더라도 적극적인 정치참여만이 잘못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부장, 현장 간부 동지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위원장 유지현

[민주노총 논평]

야권의 반성 노동의 성찰, 더 많은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 명확한 반MB 확인,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 –

총선이 끝났다. 역시 반MB 민심은 확고했다. 그 결과 18대 국회 달리 19대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은 상당히 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정권심판을 내걸고 여소야대를 목표로 했던 야권연대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애초 야권 안팎에서는 야권이 과반 이상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심은 야권의 자만과 쇄신부족을 냉정하게 질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도권과 도시지역에서 야권의 우세가 뚜렷한 만큼 정권교체의 희망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또한 더 반성하고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친서민, 비정규직 정책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책공약들이 기만이 아님을 증명하고 더 확대해야 한다. 그로써 총선결과는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 아직 몰락하지 않았을 뿐임을 겸허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총선 과정과 결과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정책 쟁점화를 통한 야권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이를 결과로서 뒷받침할 투표율이 50% 중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다. 복지사회와 노동존중에 대한 지향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는 정책을 통해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으며, 이를 열망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정작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투표일 당일까지 민주노총에 빗발쳤다는 점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민주노총은 저조한 투표율을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있음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 투쟁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60명 중에는 8명(13.3%)이 당선됐다.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특히, 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울산과 창원 등에서 패배한 것은 진보정치가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결과이다. 또한 민주노총 비례후보 집중 투표의 결과가 10.3%로 6석에 그쳤다는 점도 애석하고, 진보정당의 일부가 약진했지만 다른 일부가 정당해산과 재창당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결과도 매우 안타깝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거듭 확인된 반MB와 정권교체의 희망은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 온 노동자와 대중들의 성과임을 명확히 한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다.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라!

2012. 4. 12.

■ 통합진보당 비례 2번 이석기 후보 당선 소감

4.11 총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통합진보당에게 제3당의 지위를 부여해주신 국민과 전국적 야권연대 성사를 위해 헌신과 진심을 다해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4.11총선에서 전국적인 야권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야권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야권연대는 향후 정권교체를 위해 소중한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야권단일후보 승리, 호남지역에서의 약진 등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자 믿음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간 당원들께서 흘린 땀의 결과이기에 더욱 가치 있고 숭고합니다.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이 우리 당에 부여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뛰겠습니다. 더욱 튼튼한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여망을 기필코 완수하여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항래 후보가 비례 8번을 양보하면서 남긴 말

당 게시판에 “저는 ‘민주노총’이니, ‘농민회’니, 이러저런 힘깨나 쓰는 사회단체를 들먹이며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운동’이라는 작위적인 당위 아래에서 행세와 관료주의가 자라오지는 않았는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에둘러 심정을 표현 한 바 있다.

■ 채연아빠 2012.04.24 23:15:27 (*.126.244.184) 노동중심성 단어를 비판하며..

노동중심이면 노동자 아니면 다 곁다리인가요?
노동자를 포함하는 진보 하면 안될까요?
노동자도 상인들도 백수들도 다 "우리 진보당"이라 말 할 수 있게 만들면 안될까요? 네?

■ 현재 선거시스템으론 당내 경선 불가하다

(앞 생략) 이번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이후 파행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성을 가진 이유는 당내 권력 관계의 격심한 불평등과 불공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당내 권한의 경쟁이나 권력투쟁이 공정한 룰과 합리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내

다수를 차지한 세력에 의해 형식적으론 민주적 방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불공정한 방식이나 편법 심지어는 위법적 방식에 의해 기득권이 현상 유지되거나 변화의 가능성이 차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당의 정상적 발전 대신 지난 분당 사태처럼 분열이라는 잠재적 폭발력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형식적인 합리적 절차를 통한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분란의 소지가 되었는데 하물려 독점된 권한과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하고 심지어 위법적인 방식에 의한 패권주의에 대해 얌전히 동의할 당원들과 국민들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정 의혹은 우연적인 일시적 사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당내 패권주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이번 부정선거 발생 및 의혹을 통해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패권주의에 대한 구체적 저항으로 한꺼번에 거대하게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통합진보당 군포시 공동위원장 송재영

■ 양대 노총의 총선 성적표 초라

민주노총 ; 지지후보 60명중 8명 당선, 진보정치 1번지에서 참패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 5명, 새누리당 2명 진출

제19대 4·11 총선 노동계 출신 당선자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한국노총),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한국노총), 김동철(광주 광산갑, 한국노총), 노웅래(서울 마포갑, 민주노총), 이목희(서울 금천, 민주노총), 홍영표(인천 부평을, 민주노총)	김기준(한국노총) 한정애(한국노총)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한국노총)	최봉홍(한국노총)
통합진보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민주노총), 김미희(성남 중원, 민주노총), 김선동(순천 곡성, 민주노총), 이상규(서울 관악을,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지지한 당선자: 노회찬(서울 노원병), 강동원(남원 순창), 오병윤(광주 서구을)	정진후(민주노총)